http://www.cerik.re.kr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76호
2018. 9. 17

정책동향

- 9·13대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 효과 진단

시장동향

- 7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
- 2018년 2/4분기 건설업 경영 분석

산업정보

-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 매년 2.1% 이상 늘려
- 유럽의 인프라 투자 동향

건설논단

- 지역경제 회복 위해 인프라 투자 정책 재검토 필요

연구원 소식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社告 추석 연휴인 9월 24일자 건설동향브리핑은 쉽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9·13대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 효과 진단

- 세제 강화 및 대출 수요 억제로 투기 수요 차단, 추가 대책도 시사 -

정부, 공급 확대책을 골자로 한 8·27대책 이어 투기 수요 차단 중심의 9·13대책 발표

- 정부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의 유입으로 인해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단기간 내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세제 및 대출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9·13대책을 발표함.
  - 이번 대책은 다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종부세) 강화(+0.1%p~+1.2%p)가 중점임.
  - 그 외에도 1주택 이상 보유자[1]에 대한 △세 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 300%), △거주 목적 외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전세자금 대출시 공적 보증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LTV 10%p 가산),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단축(2년), △분양권/입주권을 소유·취득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 △전매 제한(최대 8년) 및 거주 의무 기간(최대 5년) 강화 등 투기 수요 억제에 총력을 다함.
  - 반대로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정[2]으로 주택을 일시적·영구적으로 추가 마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종 예외 규정을 통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또한, 그동안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장려했던 임대사업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편법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 가산) 및 양도세 면세 주택 가액 기준을 신설함(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종부세에 합산 과세하고 LTV 규제·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도 도입함.
  -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공시지가 9억원, 시가 1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인상(+0.2~0.7%p)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하는 등 세제를 강화함.
  - 그 외 기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목표를 기존 90%에서 추가 상향하여 2020년까지 연 5%p씩 100%를 달성하도록 하고, 침체를 보이는 지방 주택시장에는 관리 정책을 신규 도입함.

- 지난 8·27 대책에 이어 주택 수요에 부응한 공급 강화를 다시 한 번 언급함.
  -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GB) 등에 공공 택지 30곳을 개발해 주택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임. 아울러 도심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를 견지함.
  - 국토부에서 발표할 9·21 대책에서 구체적 GB 해제지역, 공공택지 개발지역이 포함될 예정임.

---

1) 9·13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됨.
2) ① 기존 주택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2년 內) : 내집 키우기, 결혼, 부모 봉양(동거),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1조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② 기존 주택 보유 인정 : 내집 마련 위한 분가, 부모 봉양(별거), 근무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중인 주택.

<표 1> 2018년 8월 이후 분야별 부동산 대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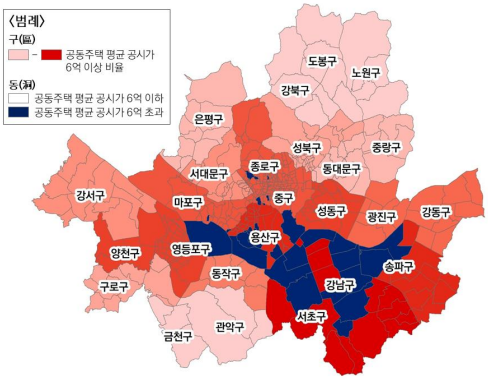
구분		8·27대책	9·13대책	9·21대책(예상)
투기 수요 차단	종부세		• 세율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조정(고가 1주택 포함)	
	국지 규제	• 규제지역 확대·조정	•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또는 대출 요건 강화	
	다주택자 규제	• LTV, DTI 강화 적용 • 청약규제 강화 • 양도세 중과 • 분양권 전매 제한	• 다주택자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 원칙적 금지 • 분양/입주권 有주택 간주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 • 시세차익 혜택을 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하여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확대	
	고가주택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주택자 특례 실수요자 중심 개편 및 장특공제 적용 요건 강화 혹은 배제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 대출 LTV 적용, 신규 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공급 확대		• 30만호 이상 공급 가능한 30여 개 공공택지 추가 개발	• 환경 가치 낮은 3급 이하 GB 해제 • 도심 내 규제 완화 • 공공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강화	• GB 해제지·공공택지 입지/수량 확정

자료 : 각 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8.8.27. ; 관계부처 합동, 2018.9.13).

시장에 투기 억제 시그널 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정책 효과는 지켜봐야

-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로 종부세 증세 대상자로 편입된 인구는 약 19만 2,000명으로 집계됨.
  - 세수 증액 효과는 기존 7,400억원에서 약 2,700억원 증가한 1조 150억원으로 추산됨.
  - 지역별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분석 결과 서울 강남구, 서초구의 6억원 초과 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용산구와 송파구 등이 그 뒤를 이어 해당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구별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분포



주 : 서울특별시 내 2018년 1월 기준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정보를 재구성함.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가격 정보(data.go.kr, 2018.9.13.접속).

<표 2>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 6억원 초과 동

구(가나다順)	동(표본 수)
강남구	개포동(22,144), 대치동(24,269), 도곡동(16,524), 삼성동(14,011), 압구정동(10.335), 청담동(8,954)
마포구	하중동(501)
서초구	반포동(24,120), 서초동(28,181), 염곡동(9), 잠원동(16,742)
송파구	신천동(15,109), 잠실동(33,657)
영등포구	여의도동(10,121)
용산구	서빙고동(1,740), 용산동5가(888), 이촌동(12,730), 청암동(197), 한강로1가(734), 한강로2가(1,043), 한강로3가(1,443)
종로구	가회동(89), 견지동(54), 내수동(598), 사직동(1,011)
중구	남대문로5가(136), 회현동2가(245)

주 : 서울특별시 2018년 1월 기준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을 재구성함.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가격 정보.

- 대책 시행까지 시일이 남아 있고, 세율 조정은 국회를 거쳐야 하므로 당장의 정책 효과보다는 시장이 본 대책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정부 역시 추가 대책을 시사한 만큼 단기 효과를 노리기보다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김성환(부연구위원 · shkim@cerik.re.kr)

7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

- 공공 11.7% 감소 · 민간 28.1% 증가, 발전소 · 도로 · 토지조성 수주 늘어 -

2018년 7월 건설 수주, 민간 수주가 양호해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

-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이 부진했으나 민간부문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통계가 작성된 1976년 이래 7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0조 1,262억원을 기록함.
  - 결국,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해 지난 6월에 14.8%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양호한 모습을 보임.

공공부문, 주택 제외한 모든 공종에서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1.7% 감소

- 공공 수주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종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1.7% 감소한 1조 5,991억원을 기록함.
  - 토목 수주는 7월 수주로서 5년래 최저치인 9,672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전년 동월 대비 22.0% 줄어들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주택 수주는 지난해 7월 수주가 부진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7% 증가한 3,970억원을 기록함.
  - 한편, 비주택 건축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9.9% 감소한 2,348억원을 기록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임.

<표 1> 2018년 7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주택	비주택
2017. 7월	8,470.2	1,811.4	1,239.3	572.1	181.5	390.6	6,658.8	418.6	6,240.1	4,178.1	2,062.0
2018. 7월	10,126.2	1,599.1	967.2	631.8	397.0	234.8	8,527.2	3,285.7	5,241.5	2,679.5	2,562.0
증감률	19.6	-11.7	-22.0	10.4	118.7	-39.9	28.1	684.9	-16.0	-35.9	24.2
2017. 1~7월	76,418.4	16,643.5	10,237.4	6,406.1	3,254.1	3,152.0	59,774.9	9,677.3	50,097.7	31,313.1	18,784.6
2018. 1~7월	73,060.1	12,712.5	8,226.4	4,486.1	2,593.3	1,892.8	60,347.6	13,680.6	46,667.0	26,277.1	20,389.9
증감률	-4.4	-23.6	-19.6	-30.0	-20.3	-39.9	1.0	41.4	-6.8	-16.1	8.5

자료 : 통계청(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민간부문, 토목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양호해 전년 동월 대비 28.1% 증가

- 2018년 7월 민간 수주는 토목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7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8조 5,27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28.1% 증가함.
  - 토목 수주는 대규모 발전소 수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4.9% 급등한 3조 2,857억원을 기록함.
  - 주택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5.9% 감소한 2조 6,795억원을 기록함으로써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비주택 건축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4.2% 증가한 2조 5,620억원을 기록함.

세부 공종별로 주택과 공장 수주가 부진한 반면, 발전소와 토지조성 등은 매우 양호

- 건축 공종의 경우 건축은 사무실 및 점포와 기타 수주는 양호했으나, 주택과 공장, 관공서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임(<표 2> 참조).
  - 주택 수주는 민간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4% 감소함.
  - 공장 및 창고와 관공서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2%, 29.5% 감소해 부진했음.
  - 사무실 및 점포와 기타 건축 수주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3.2%, 142.5% 증가함.

- 토목 공종의 경우 발전소와 토지조성, 도로 수주는 매우 양호했으나, 철도와 기계설치, 항만 및 공항 등의 수주는 부진하였음.
  - 발전 및 송전 수주는 삼척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수주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6,483.4%나 급등함.
  - 토지조성과 도로 및 교량 수주도 각각 338.9%, 164.5% 증가해 양호했음.
  - 한편, 기계설치와 항만 및 공항 수주는 각각 30.5% 79.1% 감소했으며, 철도 및 궤도 수주도 90.5%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표 2>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토지조성	항만 및 공항	기계설치	발전 및 송전
2018. 7월	3076.5	1755.9	501.0	281.7	258.0	515.5	10.7	1,082.5	131.6	159.3	2,153.8
증감률	-29.4	33.2	-20.2	-29.5	142.5	164.5	-90.5	338.9	-79.1	-30.5	6,483.4
2018. 1~7월	28,870.4	10,550.0	7,955.9	2,691.5	1,085.3	4,133.0	432.0	2,892.3	915.8	3,724.0	7,876.0
증감률	-16.5	0.0	22.5	-34.2	35.1	-18.9	-60.5	67.9	-12.7	8.1	69.1

자료 : 통계청.

박철한(부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2018년 2/4분기 건설업 경영 분석

- 총자산증가율 하락하였으나 수익성 및 안정성은 모두 양호 -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상승, 총자산증가율은 하락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18년 2/4분기 건설업 매출액증가율은 8.02%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표 1> 참조).
  - 2017년 2/4분기 6.11%였던 매출액증가율은 2018년 2/4분기 8.02%로 1.91%p 증가함.
  - 건설업 매출액증가율은 2018년 1/4분기 0.62%까지 하락하였으나 2018년 2/4분기 다시 상승함.

- 건설 수주가 몇 년에 걸쳐 건설 투자에 반영되고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업 매출액은 올해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건설 수주는 2015년 158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6년에도 164조 9,000억원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2017년에는 160조 4,000억원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음. 이와 같은 높은 수주 실적은 향후 몇 년에 걸쳐 건설 투자 및 기업 매출 실현에 반영됨.
  - 2018년 상반기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한 71조원 수준임.

- 주택경기의 하락과 SOC 투자 감소로 건설 수주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건설 투자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약 212조원이었던 건설 투자는 2016년 233조원, 2017년 251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임.
  - 건설업 매출액증가율도 내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건설업 총자산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함.
  - 2017년 2/4분기 3.12%였던 총자산증가율은 2018년 2/4분기 2.28%로 전년 동기 대비 0.84%p 만큼 하락함.

수익성 지표, 전년 동기 대비 상승

- 2018년 2/4분기 건설업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세전순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상승함.
  -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2017년 2/4분기 8.41%에서 2018년 2/4분기 9.34%로 0.93%p 상승함.

- 매출액영업이익률 역시 2017년 2/4분기 8.55%에서 2018년 2/4분기 9.03%로 0.48%p 개선됨.

◎ 2018년 2/4분기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 개선과 금융비용의 하락으로 크게 상승함.

- 2018년 2/4분기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100]은 1,231.78%를 기록해 2017년 2/4분기의 583.9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함.
- 차입금평균이자율은 2018년 2/4분기 4.35%로 전년 동기(4.55%) 대비 0.20%p 하락함.

◎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100]은 2018년 2/4분기에 1.14%를 기록함으로써 2017년 2/4분기의 0.94%보다 0.20%p 상승함.

안정성 지표 역시 전 분기 대비 모두 개선됨.

◎ 2018년 2/4분기 건설업 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는 모두 2018년 1/4분기 말 대비 개선됨.

- 2018년 2/4분기 자기자본비율은 43.12%로 2018년 1/4분기의 40.12%에 비해 3.00%p 상승함.
- 2018년 1/4분기 149.23%까지 상승했던 부채비율은 2018년 2/4분기 131.91%로 17.32%p 하락하면서 2017년 4/4분기(131.09%) 수준 가까이 회복함.
- 2018년 2/4분기 차입금의존도[(차입금+회사채)/총자산×100]는 1/4분기의 19.58%보다 0.58%p 하락한 19.00%임.

◎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모두 2018년 1/4분기에는 2017년 4/4분기 대비 악화된 바 있으나, 2018년 2/4분기에 다시 조금씩 회복한 수치를 보임.

- 2017년 4/4분기 자기자본비율은 43.27%, 부채비율은 131.09%, 차입금의존도는 18.94%였음.

<표 1> 주요 경영 지표

(단위 : %)

구분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구분	안정성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세전순 이익률	매출액 영업 이익률	이자보 상비율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 본비율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건설업	2017 2/4	3.12	6.11	8.41	8.55	583.94	0.94	2018 1/4	40.12	149.23	19.58
	2018 2/4	2.28	8.02	9.34	9.03	1,231.78	1.14	2018 2/4	43.12	131.91	19.00
제조업	2018 2/4	1.66	4.35	9.83	9.52	1,066.41	0.90	2018 2/4	60.53	65.22	19.65
전 산업	2018 2/4	1.16	4.81	7.68	7.71	765.69	0.88	2018 2/4	54.74	82.69	22.13

자료 : 한국은행(2018.9.13), 2018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

이지혜(부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 매년 2.1% 이상 늘려

– 산업 성장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규제 보완·완화로 생산성도 혁신 –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 정책, 지속적인 확대 기조 유지[3)]

- 2018년 9월 11일 국회에서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을 주제로 열렸던 국제 컨퍼런스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는 매년 평균적으로 2.1%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됨. 건설시장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재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의 인프라 시장 규모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5~7.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브렉시트(Brexit)라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인프라 투자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 건설시장은 향후 10년간 유럽 권역의 평균 이상으로 커져 매년 2.7%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건설시장은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이후 공공 재원의 증가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하지만 민간 재원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 수립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분석됨.
  - 인프라 경쟁력이 높은 싱가포르도 교통 및 상수도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면서 연평균 2.8% 수준의 인프라 투자 증가가 예상됨.

- 특히,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 인프라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매년 7~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 및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2050년까지 약 50조 달러 이상이 도시 인프라에 투자될 것으로 분석됨.
  - 세계 GDP의 80%가 도시에서 발생하며, 전체 인구의 5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인프라 투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규제 보완으로 건설 생산성 혁신

- 건설시장의 전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산업의 경쟁 심화는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3) 본고는 2018년 9월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관한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국제 컨퍼런스 내용을 요약한 것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주도하면서 민간 기업을 유인하는 제도적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자동화를 통한 제작 및 설치 등 신기술 도입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으로 2020년까지 매년 현장 생산성을 2~3%씩 향상시키고 있음.
  - 기술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보완 및 완화하면서 신기술 도입에 의한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 산업에서 기술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간에 기술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공공과 민간의 상호 긍정적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

- 선진국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건설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인건비 상승에 의한 수익성 악화 등의 효율적인 극복을 건설 생산성 혁신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싱가포르는 공장 제작 및 조립 방식의 활성화와 신기술 도입 본격화로 2015년부터 매년 2~3%씩 건설 생산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경험하고 있음.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의 공장 제작 및 설치 기술의 활성화는 약 40% 이상의 인력 감축 효과를 유발하고, 인력 수급 문제 해소, 안전성 및 품질 향상, 환경(소음, 먼지 등) 개선, 공사 기간 단축 등의 성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는 경쟁력 및 건설 생산성 제고의 시작

- 인프라 경쟁력이 높은 선진국들도 공통적으로 인프라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고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시금석이 될 것임.

-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건설 생산성 혁신은 정부 주도의 제도적 보완과 지원책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 이는 향후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임.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

유럽의 인프라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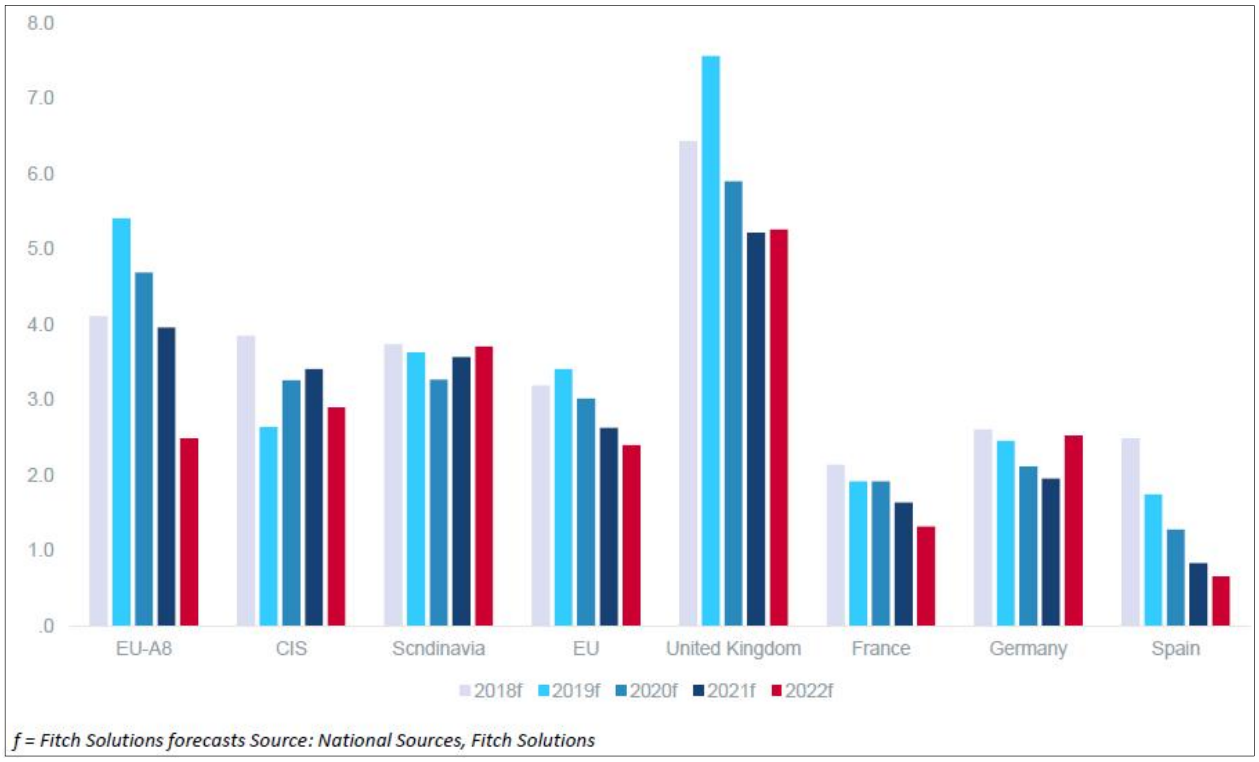
- 재투자와 기술 발전 대응을 위한 지속적 투자 규모 증가 -

Fitch Solution, 2018년 유럽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을 약 3.1%로 예상

- Fitch Solution은 2018년 유럽의 실질금액 기준 인프라 투자 증가율을 약 3.1%[4]로, 그리고 향후 4년간 투자 증가율을 약 3.2~2.4% 수준으로 전망함.
  - 유럽 각국 중 영국이 가장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함.

<그림 1> 2018년 유럽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 및 향후 전망(2019~2022년)

(단위 : 전년도 대비 실질금액 기준 증가율, %)



주 : 1) EU-A8 :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등 2004년에 EU에 가입한 8개국.
2)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등 구러시아 소속 독립국연합.
3) Scandinavia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반도 인근 국가.

자료 :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세미나' 발표 자료 ; Fitch Solutions(2018. 9).

4) 실질 증가율이 3.1%p이므로 약 2% 내외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명목 투자금액 증가율은 약 5.16%p 내외 수준임.

-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성장률이 타 국가들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의 실질 투자 증가율이 예상되므로 명목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향후 4년간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인프라 투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경제 규모 성장과 대체 투자 수요

- 유럽은 다른 지역보다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지역이지만 재투자 수요와 경제 규모 성장이 투자 금액 증가를 견인함.

- 특히, 지속적인 기술적인 진보도 인프라 투자 규모 성장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 재투자 수요는 물리적인 진부화(depreciation)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진부화(obsolescence)로부터도 기인함.
  - 최근에는 EU를 중심으로 승객 수송용 고속열차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음.

독일은 인프라를 미래 기술과의 집합체로 인식

- 독일은 유럽 중심에 위치하므로 동·서 유럽 간 내륙 물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EU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의 수요를 감당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장의 유휴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사업(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독일에서 교통과 인프라 서비스 제공을 총괄하는 부처의 이름은 '연방 교통·건축 및 도시 개발부(Federal Ministry of Transportation, Building and Urban Development, BMVBS)'였지만, 2013년 12월에 '연방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BMVI)'로 직제와 명칭을 변경함.
  - 디지털 부서의 주요 역할은 자율주행(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 AI를 결합한 운송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디지털 테스트 베드(Digital test Beds), 그리고 광대역 통신망(Broadband deployment) 등의 활성화임.
  - 독일은 인프라와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력함.

박수진(연구위원 · jin@cerik.re.kr)

정부 및 건설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9.4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 제19차 회의에 박용석 산업정책연구실장 참여
9.7	국회예산정책처	•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주택도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9.10	국무조정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TF 회의에 기술정책연구실 김우영 연구위원 참석
9.14	기획재정부	• APEC Outreach Forum에 경영금융연구실 박수진 연구위원 참석

주요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연구자료	생활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 프로젝트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인프라' 확대를 언급한 이후 각 부처에서는 발 빠르게 이에 대응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에 정의된 생활인프라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시설임. - 지난 8월 27일 인프라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에서는 2019년 인프라 관련 예산을 금년 대비 50% 이상 증액한 8조원 가량으로 발표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인프라 실태 진단과 지역민 대상의 인프라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분야를 신규 정립하고, 지역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제시하고자 함 •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실태 진단은 크게 △실태 및 현황 파악과 △노후도 정도 및 안전 수준 분석으로 이루어짐. - 먼저 국내 생활밀착형 인프라 시설군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필수 시설의 확보가 미달되어 그 확충이 필수적이거나, 선진 외국 대비 낮은 확보율을 보여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노후화의 측면에 있어서도 시설 분야마다 상이하지만 공용연수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가 수요 대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에서 발굴한 16개 지역의 핵심 인프라 사업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를 재선별함. • 집계 결과 핵심 프로젝트의 전체 사업 건수는 총 655건으로 조사되었고, 총사업비는 69조 600.8억원으로 파악되었음. 사업 건수는 사업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프로젝트 47건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집행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 분야별 집계 결과 사업 건수는 환경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가 133건(20.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19.1%), 교통(18.0%), 주거(16.0%), 교육 및 복지(6.3%) 순으로 나타남. 사업비 측면에서는 안전 분야의 사업비가 17조 4,594.8억원(25.3%)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24.6%), 환경(18.0%), 주거(16.2%), 문화·관광·체육(10.9%), 교육 및 복지(5.1%) 순으로 집계됨

지역경제 회복 위해 인프라 투자 정책 재검토 필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SOC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2019년도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예산을 8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12조원 규모라고 한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일자리 여건 및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 생활 SOC의 공급 확충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생활 SOC 공급 확대와 관련해 지역 수요, 즉 지역민 생활의 질 개선과 지역 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기대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지역 SOC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SOC 예산 편성이 실질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현재 지역마다 인프라의 양적, 질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있다. 우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가 부족하다. 각 지역은 산업 및 관광 등 경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창조를 지역의 가장 중요한 발전 방향으로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경제 시설, 각종 환경 및 안전 관련 시설 등이 부족해 지역발전 계획의 실현성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한 지역 내에서도, 그리고 지역 간 각종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이다. 이는 대표적인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민들이 생활하는 주변의 공공 편의시설, 공원 및 녹지, 상·하수도 시설 등이 지역 내에서도 도시와 농·산·어촌 간, 도시의 원도심과 신도심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세종시의 경우 10만 2,200㎡인 반면, 광주는 6,200㎡, 제주는 3,100㎡로 그 차이가 확연하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에 있어서도 강원도는 27.3개소인 데 반해 부산 5.7개소, 울산 7.4개소 등으로 5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지역 인프라 시설의 또 다른 문제는 노후화의 급진전이다. 예를 들어 전국 상수관로의 32%, 하수관로의 40%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고, 교량 및 터널, 지하 시설물 등 주요 도로 시설물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이와 함께 2017년 12월 기준 1,189개소의 산업단지 중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가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특히, 농촌 지역 농공단지의 노후화는 매우 심각하다.

더 심각한 것은 주거시설의 노후화 문제다. 2016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주거용 건축의 동수 기준으로 노후 주거시설이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30년 이상도 36%에 이른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인프라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 참가 인구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향후 지방 세수의 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역의 인프라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는 교통 및 경제 인프라는 물론, 생활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이 안고 있는 심각한 인프라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이번의 생활 SOC 확대를 위한 예산 및 정책 추진을 계기로 지역 인프라의 양적·질적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아일보, 2018.9.2.〉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